

##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형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55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11. 19.

발 의 자 : 이형석 · 송갑석 · 문진석  
민형배 · 장경태 · 이용빈  
양향자 · 이병훈 · 윤영덕  
인재근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0년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, 1년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 
상습체납자는 17,703명에 이르며 체납금액은 7,903억여원에 달함.

현행법 상 지방세 고액 악덕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명단 공개  
에 불과해 상당수 고액 세금 체납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
고 지방세를 체납하며 호의호식하고 있음.

따라서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  
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·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 
조치가 필요함.

이에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  
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 
고액·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30  
일 이내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

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고액·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 
실효성을 높이하고자함(안 제11조의2).

##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고액·상습채납자의 감치)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채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채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채납자를 감치(監置)에 처할 수 있다.

1. 지방세를 3회 이상 채납하고 있을 것
  2. 채납된 지방세가 채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
  3. 채납된 지방세 채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것
  4. 채납된 지방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납하였을 것
  5. 해당 채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에 대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 제 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을 것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채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 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채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.
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되지 아니한다.
- 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.
-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 시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, 감치기간,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에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.
- ⑧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절차 및 그 집행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고액·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<p><u>제11조의2(고액·상습채납자의 감치)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채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채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채납자를 감치(監置)에 처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지방세를 3회 이상 채납하고 있을 것</u></li> <li><u>2. 채납된 지방세가 채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</u></li> <li><u>3. 채납된 지방세 채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것</u></li> <li><u>4. 채납된 지방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납하였을 것</u></li> <li><u>5. 해당 채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에 대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 제 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을 것</u></li> </ol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되지 아니한다.

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.

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

감치집행 시 감치대상자에게  
감치사유, 감치기간, 감치집행  
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 
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에 감치  
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  
여야 한다.

⑧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  
는 재판의 절차 및 그 집행, 그  
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  
칙으로 정한다.